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름 여가 지났다. 위밍업도 없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특히 국정을 잘 수습해달라는 호남의 바람은 크다. 1년이 남지 않았다.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략적 선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진다. 2022년 20대 대선 직후 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올해 21대 대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9회에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를 포함해 11곳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가능하다. 다만 2018년 7회 때 14곳 압승에는 미치지 못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기술어인 구도에 서도 동서 분할이 여전했다. 민주당이 안방인 호남을 튼튼히 하면서 충청을 지키는 한편으로 40% 가까이 지지해 준 부산을 비롯한 경남에 총력전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 이내의 득표율로 혼전을 벌인 곳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청권과 PK(부산·울산·경남)지역이 최대 승부처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은 전통적인 강세로 민주당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국내외 정치와 경제, 사회 불안은 조기에 해소하며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한다면 별반 문제가 없다. 물론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기심(不欺心)

단적으로 대선 직전 치러진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총력전을 펼치고도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같은 야당에서 이제는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졌고 진보당과 정의당, 민주노동당 등의 도전도 한층 거셀 것이다. 야권으로선 대야투쟁, 선명성 경쟁은 필연 아닌가. 내란사태에 동조한 정당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재창당에 준하는 강력한 쇄신에 성공한다면 이 또한 무시 못할 변수다. 여기에 일단 독점의 정치 지형에 따른 폐해가 깊이지 않았던 만큼 다자 구도에 대한 공감대도 주민들 사이 파고들고 있다.

다가올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경계해야 한다. 호남에서도 야당과 예측 불허의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민주당은 호남에서 득표율 90% 이상 절대다수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80% 중반으로 집계됐다. 15대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둔 광주 97.28%, 전남 94.61%,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95.17%, 93.38% 수준을 염두에 뒀을 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61.14%, 59.87%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표를 나눠 가져 직접 비교는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극복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2022년 대선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내란 심판을 위해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 한 사유화된 권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지 않는 절묘한 분할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신중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겠지만 무소불위의 위세라면 금세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소통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협치해야 한다.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것이다. 또 시대적 과제인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속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과 5·18 헌법전문 수록,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허브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대표적이다. 상생 과제로는 광주·민·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행차야 한다.

‘여대명’은 곤경했다. 독주였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었다. 준비된 최고 리더임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와 민주당이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광주·전남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호남의 민심을 얻으려면 말이 아닌 말, 말이 못 되는 말을 삼가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보 사무실 옆 광주공원에는 심사 신동욱 선생의 항일사적비가 있다. 전면의 문구는 좌우명인 ‘불기심(不欺心)’이다. 공자는 정치란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 지도자가 올바르면 따르는 국민도 올바르게 된다. 진실 되게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여당이라면 여당다워야 한다.

G-로드, 무등산 차로 옆 보행 안전데크 설치

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거기다 이 지역에는 충장사, 충효마을, 한국가사문학관 등 생태·문화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보행 기반시설이 없어 안전성과 접근성이 떨어진 상태다. 광주호 데크길, 화순 수만리 데크길을 보더라도 방문객들이 주변의 풍광을 즐기며 편하게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등산 차로에 안전 보행데크를 만들면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살리면서 관광객으로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다. 이곳이 널리 알려져 수많은 워킹족이 찾는다면 관광콘텐츠로 자리잡는 동시에 광주와 무등산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무등산 G-로드는 모두 3단계로 나눠 보행데크가 설치되었으면 한다. 1단계는 무등로(원효사 입구-충장사, 3.3km) 구간이다. 이 길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숲 경관이 뛰어나 데크 설치가 용이하다. 2단계 송강로(충장사-충효동 분청사기전시장-금곡마을-충효마을-가사문학관, 4.9km) 구간은 분청사기와 가사문학이라는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보행로로 활용하기에 안정맞춤이다. 3단계는 무등로(충장사-충민사-제4수원지 청풍습터, 2.8km) 구간이다. 휴식형 보행길로 조성해 생태와 명상 공간으로 특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광주의 자연, 역사, 생태,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광주형 생태관광 자원을 창출

할 수 있다. 원효사에서 출발해 충장사, 충효마을, 한국가사문학관 등을 잇는 경로를 걷는다면 광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곳을 오래도록 품고 또 찾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광주를 ‘걷는 도시’, ‘사색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데크는 자연 생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존과 체험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환경 보전과 관광 개발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걷기 관광은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과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며, 충효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무등산 G-로드는 단순히 인프라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등산의 생태·문화 자산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의 마련이다. 그 결과, 광주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동시에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해서, 무등산 차로에 안전 보행데크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이 즐겨 찾으며 외국인이 한번 오면 잊지 못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확실하고 명료한 우리만의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길 이 열릴 것이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괴롭힘까지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폭력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성적 괴롭힘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가정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따뜻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디지털 공감력을 기르는 것이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주상운·무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社説

위기의 골목경제 살려라 광주 상황실 역할도 막중

광주시가 골목경제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골목상권 주변 도로의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상점가 1대 1 매칭을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절감,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른바 ‘골목경제상황실’은 지역상권의 활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중심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협업을 통해 장보기, 점심식사 가기, 전통시장 이용 확대, 홍보광고 제작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쉽게 버티고 있다는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요 상권 내 상점마다 임대표지가 나붙었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 소비쿠폰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으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

로 반영됐다. 광주시는 새 정부와 발맞춰 전력투구하고자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골목경제상황실’과 양 날개로 가동중인 것이다. 정권 출범 후 초기 100일을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을 회복시킬 시간으로 삼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며 자금채널 힘든 적이 없다고 탄식을 쏟아낸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재료 가격에 직원 월급과 월세까지 감당 못하고 있다. 저녁시간조차 손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고 한다. 하나 둘 문을 닫는 가게는 늘어나고, 임대료를 낮춘다고 해도 새 점주가 나타나지 않는다. 광주시 또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는데, 바짝 고삐를 죄야 하겠다.

한숨이 깊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실행력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칠길 바란다. 일회성 지원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일촉즉발의 위기다.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해설서에 담긴 AI·에너지산업 기대감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정책 해설서에 광주는 인공지능(AI), 전남은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겼다.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의 밑그림이 공개된 것으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남권을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2031년까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로 들어서는 발전 인프라를 발판 삼아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컴퓨팅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남권 공공의료(국립의대 신설) 공약도 포함했다. 여수를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구상도 들어있다.

광주시는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 대선 공약 상황실을 꾸렸다. 새 정부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핵심 현안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가 국정기획위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엔 부위

원장을 맡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흥근 기획분과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등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분과 위원에도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길(동남을·기획)·박군택(광산갑·정치행정) 의원이 배정돼 역할이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실함에서다.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릴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다행히 광주·전남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그렇듯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수가 일맥상통하는 만큼 유리한 구도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향후 5년의 지역발전 방향이 좌우된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지역 간 형평성, 부처 정책 조율, 재정·여건 등 복합적 변수를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전남도의 다급한 현안이 적지 않다. 우선 순위를 다듬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다카시 광장

리셋, 삶을 묻는다

위혜숙

채우기보다 남음을 비워
생각의 각도 돌려보고
꺾인 날개 다시 세워

작은 변화 씨앗 하나
깃털의 시간, 꿈을 심는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재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독자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함께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이버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범죄로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친구 사이에 가벼운 말다툼에서 시작된 욕설과 조롱,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 악의적인 영상·사진 유포, 익명 앱을 통한 협박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